

법원, 2심에서도 케이블 TV 무단 재송신 금지 판결

1심 판결 유지, 법원 “지상파 방송 무단 송신 중지해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엠,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HCN 서초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작년 9월 있었던 케이블 업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를 확정하는 판결로 사실상 법원은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TV 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SO들은 재송신 행위가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영리 창출 기여 정도도 수신 보조 차원을 넘어선다”고 밝히며

“지상파가 과거 재송신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 포기 또는 불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로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한 ‘권리 침해 위반에 대한 하루 1억 원 보상’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들의 간접강제 청구는 본안 사건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그 필요성도 없다”고 전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재송신 중단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SBS-KT스카이라이프 사이에 벌어졌던 HD 화면 송출 중지 등의 사태가 급세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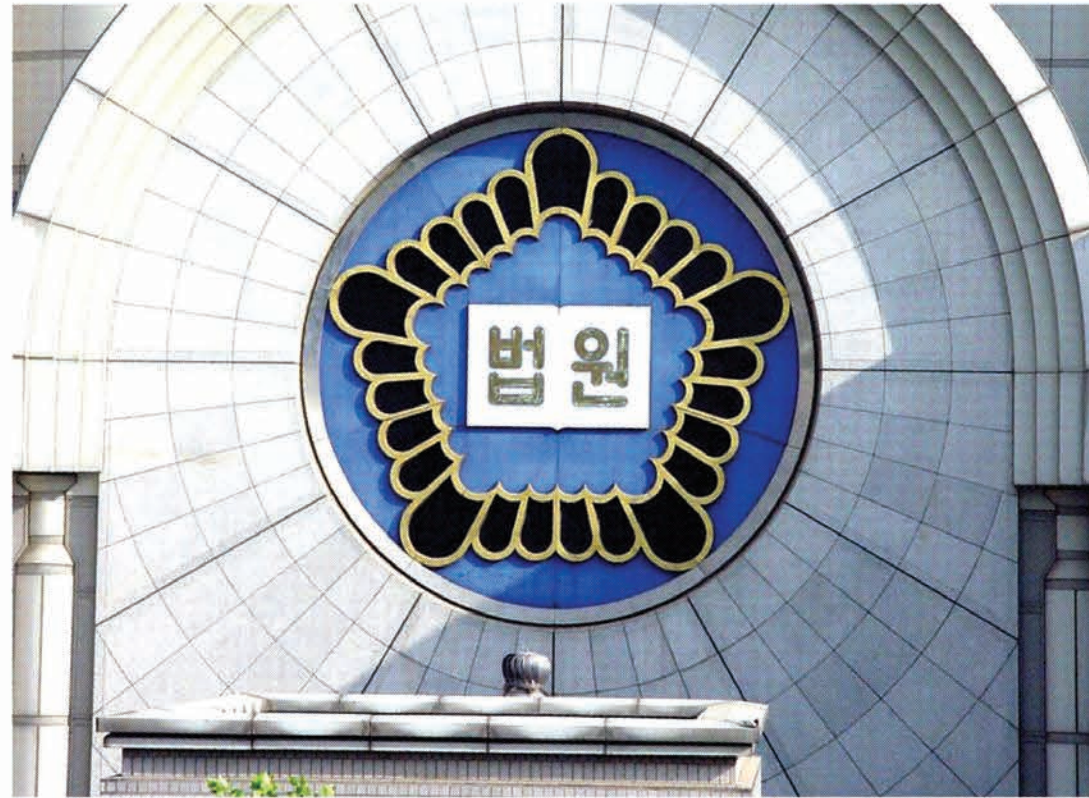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난 1심에 이어 케이블 업계의 무단 지상파 재송신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저

지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앞으로 벌어질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를 아우르는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각 방송사들도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케이블 업계는 이번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즉각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간접 강제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25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옥석을 가리겠다는 각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상파 콘텐츠의 무단 재송출을 제정한 명명백백한 법원의 판결에 케이블 업체가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

668MHz폭 신규 주파수 발굴 목표로 세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을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의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가의 700MHz 주파수 문제와도 맞물려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디지털 전환 후 회수할 수 있는 여유 주파수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주파수 사용 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기술인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 1년 정도 기다려보고 주파수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서도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차세대 방송 서

비스를 꼽고 있는데 3DTV, UHD TV 등의 대역을 최소한 보장하려면 여유 주파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28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2.1GHz 잔여 대역을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조정 작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700MHz 규모 신규 주파수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2012년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현행 취약 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청자지원 보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케이블, 지상파 상대로 상고장 제출

CJ헬로비전, 씨앤엠,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가 민사본안 2심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엠,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주요 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TV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재송신을 하면 안 된다”고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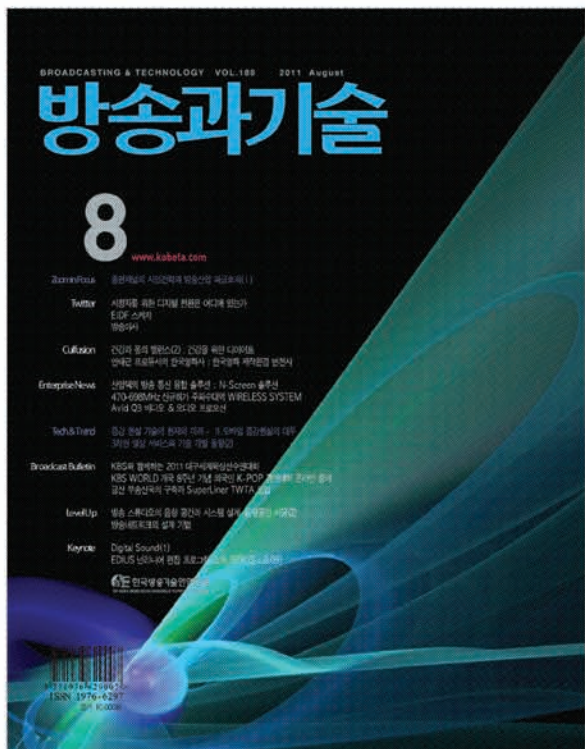
케이블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달 25일 “시청자들의 불편을 시정권을 침해하는 방송 중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방통위

를 중심으로 지상파, 케이블 TV 등이 참여하는 재송신 제도개선 협의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방통위가 제안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회와 재송신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은 케이블 업체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즉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케이블 측은 그동안 재송신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를 확대해온 만큼 지상파 방송 역시 재송신의 대가를 케이블에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와 같은 법정공방을 지속하면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가 산정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의 의견은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사설

종편특혜 중심에 '방통위'가 있다

침몰하는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

최근 세계 미디어의 최강자이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대표적인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당국의 직접 수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굴욕적인 증언을 하고 돌발상황으로 인한 모욕까지 당하는 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머독의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세계 미디어 전반을 좌지우지하던 루퍼트 머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한 비난을 쏟아내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언론·시민단체들은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머독 언론의 폐해를 조사하고 머독 소유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디어 기업의 비대화와 언론 권력의 집중화는 여론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만큼 방송 산업의 소유 겸영 규제 완화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방통위가 방송 산업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맞물려 2011년, 종편 사업자 정식 방송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통위, 종편에 돌아나려는가

이제 국내사정을 보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방통위의 종편특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종편이 왜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방통위는 아예 대놓고 종편을 온실 속 화초로 끝까지 키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 술 더 떠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5월 6일,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종편PP 승인장 교부신청'을 의결했다. 당시 매일방송은 '오는 9월 30일 보도채널(MBN)을 폐업하고 10월 1일부터 종편을 시작하겠다'는 승인장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매일방송은 보도채널 폐업일을 12월 31일로 연기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방통위는 너무나 쉽게 이를 승인했다. 원가 넘새가 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게 휘둘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통위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폐업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업자가 두 개(종편, 보도) 채널을 동시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게 정책목표'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애초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매일방송이 기존 MBN이 사용하던 채널을 그대로 승계하려는 시도가 힘을 받은 것은 물론 종편 사업자가 승인 이후 3개월 내에 출현해야 하는 100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연기할 수 있었다. 경쟁사 입장에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매일방송 입장에는 최고의 노림수가 된 셈이고 방통위는 고개만 끄덕이는 예스맨(YES-MAN)으로 전락했다는 오해가 충분하다.

2011년, 세계와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

지금 세계는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 몰락과 더불어 민영 언론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피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뚜렷한 논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울 것이 뻔한 신문 사업자들에게 방송의 문을 열어준 것도 모자라 아예 특허까지 몰아주고 있다. 거기에다 휘둘린다는 오해까지 받으면 방통위는 도대체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 굳이 루퍼트 머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있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전파의 공공성을 지키는 상책(上策)도 물 건너간 현재,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편 사업자들에게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준수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사표 냈던 김재철 MBC 사장 재신임

MBC 노조 "출근 저지, 총파업 돌입"



지난 2일 오전 MBC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사옥 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이하 방문진)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김재철 MBC 사장의 재신임을 확정했다.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의 사의 표명은 자신이 추진해온 지역 MBC 광역화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보류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재신임을 물고자 사표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6표, 기권 3표로 재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이번 재신임은 3선의 의미가 아닌 지난 2월 연임 당시 29대 사장으로 지위를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김 사장은 2일부터 출

근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업무 복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고, 단체협상 결렬로 준비하던 총파업 일정을 앞당겨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MBC 노조는 지난 1일 오전 여의도 을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은 사표를 제출한 그 순간 MBC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방문진은 스스로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김 사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며 "방문진이 MBC 구성원의 뜨거운 열망을 무시할 경우 MBC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안 보고

복수안 보고 … 재송신 분쟁 해결될까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업체 간 한소심 공판이 끝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재송신 범위를 전 지상파로 확대하는 1안과 일정 기간 동안 현행 재송신 범위를 유지하는 2안을 위원회에 전격 보고했다.

1안은 지상파 의무 재송신 대상 범위를 현재의 KBS1, EBS에서 '전체 지상파 방송'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며 KBS1과 EBS의 경우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일부),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의무 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저작권 조정 및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KBS의 경우 향후 수신료가 인상되어 광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KBS2도 대

가 산정 없이 무상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복수안에서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은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가칭)를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해 논길을 끊었다.

또 방통위는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행 '조정' 제도의 절차를 보완하며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중대한 분쟁 발생시'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복안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복수 보고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방송 콘텐츠 이용가치 및 재송신 비용 등 산정 연구를 위탁

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 고시를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복수 보고안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재송신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2차 항소심 공판결과를 지켜본 케이블 업체가 난시청 운운하며 대법원 상고를 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내세운 조정안이 양측에 쉽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또 무단으로 재송신을 감행하는 케이블 업체에 법원이 제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방통위의 복수 보고안이 지상파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지도 미지수다.

일본 디지털 방송 전환 불만 '폭주'

17만 건 불만 쇄도, 준비 미흡 주요인

전격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중지하고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일본에서 불만 신고 및 문의가 하루 17만 건이나 폭주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24일 정오부터 25일 아침까지 일본 총무성의 지상파 디지털 콜센터와 NHK에 관련 문의전화만 17만 건이나 접수됐다.

여기에 대부분의 문의전화는 디지털 수신기를 달지 않았거나 컨버터를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들 가구 수만 10

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24일 디지털 방송 전환 당시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수신기를 배포하고 디지털 수신기를 달지 못한 가구에 긴급 무상 대여를 시작했지만 민원이 쇄도하는 현 상황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 일본의 전격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민원 폭주에 '예고된 사태'라는 시각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디지털 방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던 당시부터 일부 학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지만

일본 당국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논리다.

게다가 이번 디지털 방송 전환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로 FM 라디오에서 TV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주요 이용 층이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 당국은 디지털 방송 신호 수신에 가능한 라디오를 제조업체에 요구했지만 채산이 맞지 않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상파 방송 전

“공공 미디어 영역 강화해야”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으로 미디어 시장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MB정부의 미디어 정책 평가와 미디어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영득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KBS와 MBC같은 공영방송을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미디어 정책으로 △미디어 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 하락 △공공 미디어 영역의 붕괴 위기 가속화 △특혜성 사업자 선정으로 정당성 위기 가속화 △언론에 관한 정치적 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신문·방송의 수익 구조 악화 △언론 및 공론영역의 붕괴 위기가 속화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허가로 공공 미디어 영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 융합 시대, 미디어 2.0 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수록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와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편은 광고시장을 교란시켜 군소 미디어와 지역 미디어를 몰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디어법 허가 정책을 제대로 세워 미디어법의 존립 목적인 △방송의 공적 성격 유지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중소규모 미디어의 안정적 생존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을 앞두고 구형 TV의 불법 투기가 증가해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약 1,000만대 이상의 TV가 불필요해 지면서 산악 지역 등에 TV 불법 투기가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대 이상의 TV 투수가 이뤄졌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불법 투기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대책은 없어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EBS 방송센터, 집중호우로 피해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 … 복구 총력



지난 29일 서울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20톤(추정)의 토사가 우면산 EBS 방송센터로 밀려와 기계실을 시작으로 세트실과 스튜디오 등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센터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잠시 동안이지만 생방송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재 우면산 센터를 중심으로 복구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8월 3일 현재도 200여 명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군병력 및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에는 전제회 문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EBS 센터 침수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재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방위 의원들은 “신사옥 이전 문제와 함께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예술의 전당 등과 공동으로 재난 매뉴얼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SBS홀딩스 ‘자사 미디어랩 소유’ 반대 기자회견 열려

미디어행동, “침묵 뒤의 호박씨…결사 반대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목동 SBS 사옥 앞에서 SBS홀딩스가 미디어랩을 직접 소유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BS홀딩스의 자사 미디어랩 소유 시도는 침묵의 뒤에서 호박씨를 까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편 사업처럼 광고 직접영업을 통한 방송환경 파괴행위에 가담하는 SBS홀딩스의 이번 시도는 지상파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

고 주장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 정책위원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랩 법안이 좌초된 이후 SBS홀딩스가 그 틈을 이용해 광고시장에 경쟁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며 “종편의 직접광고 규제도 당연하지만 이번 SBS홀딩스 사태는 광고주들이 방송의 편성 및 기획에 간섭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공성을 지키고 아젠다를 만드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기에 시장 경쟁 체제에서 멀리 있는

게 정상임에도 사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난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김창식 춘천 MBC 지부장과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도 회견장에서 이번 SBS홀딩스의 자사 미디어랩 소유는 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편 방송사들의 광고직접 영입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닥쳐오는 지금, 자사 미디어랩 소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정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백선하 최진홍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행방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 제언



김 남 호
DTV KOREA 조사통계팀장

2011년 6월 29일 14:00, 제주도는 국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번 제주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국사업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다.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원과정

우선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수행한 3곳은 사업의 대표성에 있어서 일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시범사업은 연령층, 주거형태 그리고 소득분포 등 향후 전국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제주지역은 직접수신 아날로그 TV 보유 세대가 19,519세대(제주지역세대의 9.0%)¹⁾, 공동주택 358개 단지, 65세 이상 노인 66,706명(11.7%)²⁾이며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이 다른 내륙 지역보다 양호하다.



[그림1] 시범사업 추진체계

먼저 시범사업 주요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와 같이 시청자 지원센터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위탁운영을 맡았고 각 센터장은 방통위에서 담당했다. 실제 지원 업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와 선정된 정보통신공사 업체를 통하여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안테나 설치 등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했다. 디지털방송콜센터(DTV KOREA 운영)에서는 정부지원안내 및 설치지원 안내 등을 했다. 또한 우체국에서는 시청자 지원 신청서 위탁접수 및 예치금 수납, 발송 대행업무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당초 2011년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 삭감되어 사업자체의 어려움이 예견됐다. 2010년 시범사업 예산은 90억 원이었다.

다음으로 직접수신세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게는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 TV 1대 구매비용 보조했고,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술적 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을, 일반세대에게는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임대(예치금 1만원, 3년 후 양도) 그리고 디지털 컨버터 2대를 요청하는 경우 확인 후 지원토록 했다.

실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우체국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차원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시청자에게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제주도 시범사업 지원실적에 대한 민원 현황

지원 실적(2011년 7월 10일 세대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수신 19,519세대(전체 세대의 9%) 중에서 20,800여 세대에 대한 지원을 했으며, 이는 직접수신세대 대비 106.9%의 성과다. 또한 방문 기술지원은 6,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원 세대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 컨버터 보급이 2,873세대, 일반세대 컨버터 보급은 10,891세대, DTV 구매보조 310세대, 공동수신설비지원 6,786세대이다. 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이미 정부 지원은 100%이상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15일자 <제주의 소리> 기사를 인용하면 '아날로그 방송이 끝난 후부터 15일까지 시청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방송 관련 민원 건수는 제주시가 5,923건, 서귀포시가 1,530건 등 모두 7,300여건이다.' 또한 '15일 기준 제주 시내에서 디지털 컨버터 설치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대 열흘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시청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안내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7월 말이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7월 말까지 접

수된 내용을 모두 처리하는 8월 말이면 시청자지원센터도 문을 닫는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실제로 대도시의 강전계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은 실외안테나를 건물 지붕 등에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는 7월까지 제주지역 컨버터 등 신청을 마감하고 8월까지 시청자 지원센터가 마무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제주시범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그 이후의 시청자 민원에 대한 대책이 추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민지원을 통해서 본 수신 실태 현황

제주지역에서는 지원센터 도우미 및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통한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직접수신이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DTV KOREA가 제주도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기간은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3가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EBS 디지털전환추진단도 비슷한 시기에 지원했다.

지원결과 안테나를 올바르게 설치할 경우 대부분 수신이 가능했고, 난시청 지역으로 접수받은 지역도 99% 이상 수신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1] 결론적으로 컨버터를 지원받은 전체 1만 3천여 가구 가운데 설치 지원을 아직 못 받았거나, '자가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는 이를 받아만 놓고 방치된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민 지원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난시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안테나 및 부스터 사용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진1] 안테나수신점을 제조정하는 DTV KOREA 직원



[사진2] 현장에 주로 설치된 안테나(SA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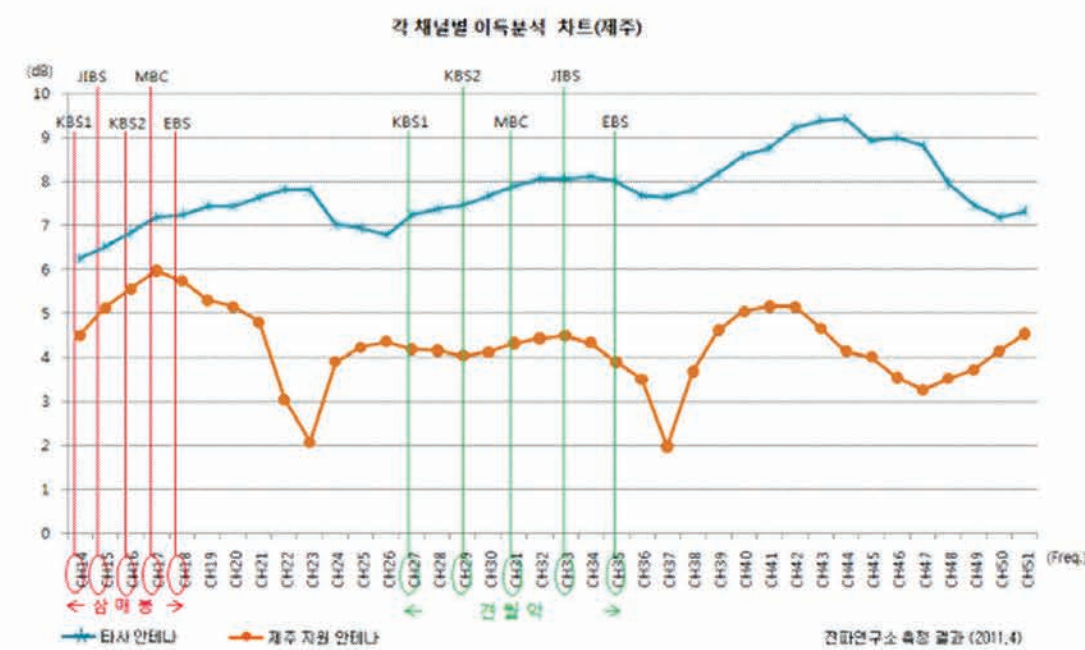
[사진3] 주로 사용된 실내용 부스터 사용 예



[사진4] 적합한 안테나 및 실외 부스터 설치 사용 예 (안테나 바로 후면에 부스터 사용)

난시청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표선면 일부지역은 난시청 지역으로 소출력 중계기를 종로시점 임박하여 매수에 설치했지만 MBC와 JIBS는 제외된 상태였다. 제주시 애월읍 일부지역은 건월악(犬月岳) 송신소 배면에 위치, 애월읍 신엄리는 직접파 대신 회절파를 수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안테나 선정 [그림2] 및 올바른 장비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또한 시청자지원센터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직원에 대한 설치 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충분한 설치 지원 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2] 안테나 이득 비교 예

면대면 접촉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부족

실제 2011년 초기 시범사업 홍보를 담당하는 DTV KOREA에 배정된 제주시범사업을 위한 순수 홍보 사업비(종료당일 각종 행사비 제외)는 1억 원이었다. 이 예산으로는 제주 곳곳에 현수막도 제대로 설치하기 어려웠다. 또한 2010년 3개 시범지역의 경우 전 세대 대상으로 정부지원 내용을 홍보했으나, 제주지역은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에게만 정부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각 제주지역 방송사의 협조를 통해 일평균 11.5회의 TV 공익광고('10.12~11.6)를 송출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수시로 아날로그방송을 통한 고정자막 및 가상종료 방송을 시행했다.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정보전달력이 떨어지는 계층 등에 대해서는 면대면 홍보가 병행되어야 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홍보가 미흡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디지털 컨버터만 배송 받고 구체적인 수신방법(안테나 설치 등) 및 지원 설치요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였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해 재전송하

는 관계로 고정자막 및 가상종료를 볼 수 없어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을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의 주요 홍보는 결국 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및 가상종료에 의존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세밀한 정보제공과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 져야 했다.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 우선 고려해야

제주도 시범사업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저소득층은 물론 공동주택 및 모든 일반세대까지 지원했으나, 종료 1일주일간 시청자지원센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타깃으로 전국 사업이 진행될 시 일반계층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2년 전 디지털 전환을 종료한 미국도 종료 당일 4,000명의 콜센터 인원을 대기했으며, 7월 24일 디지털로 전환한 일본도 1,000명의 콜센터 인력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사업을 앞두고 간이 중계소 증설 등을 통한 DTV 전파 환경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다채널에 대한 정책이 배제된 채 디지털 전환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방통위는 조속히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청자에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컨버터 우선 배분보다는 가전사를 통한 디지털 TV 구매 혜택을 모든 시청자에게 부여하고 가전사에게는 안테나 설치

등 일정부분 설치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역시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지상파 직접수신을 포기하고 유료방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추후 전국사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범사업을 수행한 방통위 관계자 및 유관 기관 종사자들은 그간 시청자 지원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1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도 시청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아날로그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세대에 대한 미시적 정책 방안의 틀을 깨고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에서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각주)
1) 제주도 전체세대 217,711세대, 2010년 동시리서치 조사 결과
2)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 방통위, 2010. 7.

SBS의 비디오 서버 기술 개발 및 방송 적용 사례



박재현
SBS 기술연구소

SBS 비디오 서버 도입 및 개발 연혁

- 1996년 GVG PDR100 기반의 광고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방송 적용
- 2000년 비디오 서버 자체 개발 결정 및 개발 착수
- 2001년 MPEG2 기반 주조 송출용 비디오 서버 자체 개발 성공
- 2004년 국내 방송사 최초 자체 개발 비디오 서버에 의한 전체 SD급 프로그램 및 모든 SB 소재(이어서, PR, ID, 시보) OnAir 송출 시작
- 2005년 국내 방송사 최초 Cliplist 기반 SD/HD 겸용 광고 연동형 송출용 비디오 서버 개발 성공(프로그램 광고 직접 송출 시스템(CM Express)에 적용) 및 OnAir 송출 시작 2006년-SD 프로그램(야심만만 및 긴급출동 SOS)
- 2006년 국내 방송사 최초 HD급 비디오 서버 개발 성공 및 OnAir 송출(시보 및 ID)
- 2006년 시차 방송용 HD급 비디오 서버 (LiveGuard) 개발 및 방송 적용(SBS 인기가요)
- 2007년 전체 SD급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광고 직접 송출 시스템 OnAir 송출
- 2008년 국내 방송사 최초 HD급 자체 개발 비디오 서버에 의한 OnAir 송출 시작
- 2010년 국내 최초 메모리 기반 비디오 서버 개발 및 OnAir 송출 시작
- 2011년 현재 비디오 서버에 의한 송출 비율 프로그램(생방송 제1) : 90%, SB : 100%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그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아날로그 신호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리고 촬영→제작→송출→아카이브에 걸친 방송의 각 업무 영역에서도 '아날로그적 프로세스'의 종료 또한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방송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업무의 디지털화 핵심은 바로 미디어의 파일화 및 네트워크를 통한 미디어의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장 미디어의 Offline 이동은 줄이면서 그 저장 미디어 속의 Contents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 방송국 내에서의 여러 분야 특히, 방송 장비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의 입력과 재생의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가 VCR에서 비디오서버로 대체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요즘이야 비디오서버의 사용을 아주 당연시 여기지만 (마치 아날로그 시대에 VCR 사용을 당연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국 내 각 업무 영역에서의 비디오 서버의 도입 내막을 살펴보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쓰기 시작한 장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의 비디오 서버의 도입과 해당 기술의 개발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현재의 우리 자신조차 예견하기 힘든)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고자 한다.

SBS 비디오 서버 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의 특징

1. 자체 개발

90년대 들어서 방송 신호의 디지털화는 저장 미디어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알림과 동시에 서서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Clip Manager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송출되는 Clip 목록 관리 및 비디오 서버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이것도 위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도입에서도 그러했듯, 송출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제품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 송출 부분에 먼저 적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디오 서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외산서버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으므로, 이를 제작이나 아카이브에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아예 비디오서버의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었으나, SBS의 경우 Clip Manager와의 연동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점, 당시 주조 자동화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개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는 점, 사용자들의 강한 의지와 협조 등의 요인과 맞물려서 송출 부분에 먼저 적용이 될 수 있었고 이후에 자체 개발되는 모든 비디오 서버들이 송출 부분에 먼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자체 비디오서버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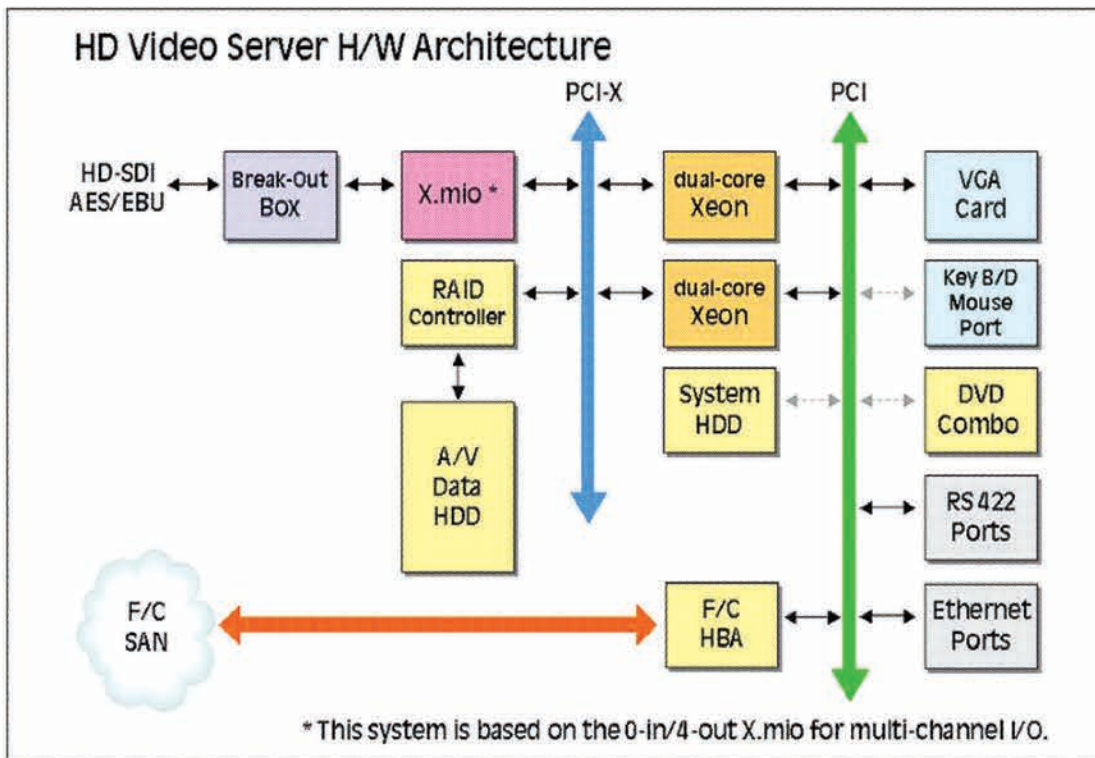
3. 송출 소재별 특화된 서버

모든 방송사가 그러하듯 SBS도 방송 진행이 프로그램과 SB를 번갈아가면서 송출하며 프로그램과 SB, SB 내에서도 소재별(이어서, PR, ID, 시보)로 소재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프로그램 : 전타이틀 + 전CMList + 본방 + 후CMList + 후타이틀

이어서 및 SBCM : 이어서(하단 광고) + CMList PR : Cliplist(내용 변경, 삽입, 삭제 가능해야 함)

ID : 하단 광고 포함
시보 : 시보 CG 포함



[그림] HD 비디오 서버 구조

히 Clip 형태로 미디어를 입력, 관리, 재생하는 장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90년대 말 처음으로 외산 비디오 서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입된 외산 제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 해당 업체에만 특성화된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미디어 호환성이 떨어짐
- 비싼 가격(150GB 정도의 Disk Array를 포함한 가격이 약 2억 원)
- 작은 용량으로 인해 프로그램 송출에는 부적합
- 친숙하지 않고, 조작이 어려운 UI

그래서 각 소재의 형태와 소재의 전송 경로 및 송출 행태에 따라 약간씩 다른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각 소재별로 특화된 비디오 서버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특화된 서버 형태 운영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장비 대수가 많아짐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송출용 소재의 특성 뿐 아니라 송출 행태 및 소재의 Update 빈도수등 해당 종류의 소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소재에 최적화된 Application을 개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송출의 안정성을 극대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SBS의 비디오 서버 도입 현황

1. 송출



[그림] 프로그램 인제스트 서버

- 프로그램 인제스트 및 Playback 서버 : 별도의 Process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소재(전타이틀, 본방, 후타이틀)와 광고 소재가 하나의 Cliplist의 형태로 송출됨



[그림] 프로그램 송출 서버

- SBCM 서버 : CM 편집실에서 제작된 이어서 및 CM 소재들을 Cliplist의 형태로 송출하되, 역시 CM 편집실에서 제작된 하단 광고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Overlay되어서 송출



[그림] 이어서 및 SBCM 송출 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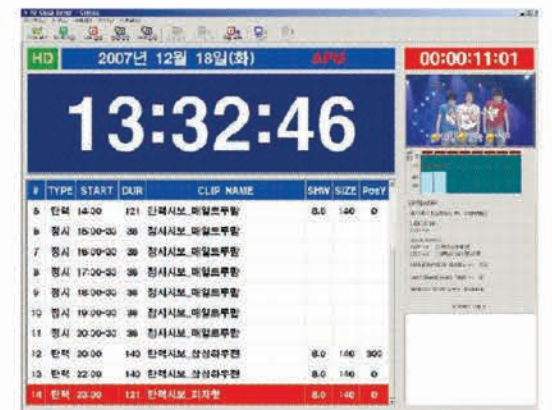
[그림] 예 송출 서버

- PR 서버 : Cliplist로 송출하되 송출 중에도 개별 Clip의 삽입, 삭제, 변경이 가능해야 함
- ID 서버 : 개별 Clip 송출하되, CM 편집실에서



[그림] ID 서버

서 미리 제작된 하단광고가 자동으로 Overlay되어서 송출
- 시보 서버 : 개별 Clip 송출하되, 미리 만들어진 시각 정보 CG가 Overlay되어서 송출



[그림] 시보 서버

2. 제작

현재 PDS/NDS 구축 중이며 영역 내의 전체 제작 프로세스에 걸쳐서 비디오 서버 도입 예정

- 인제스트룸 : 촬영된 영상을 테이프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제작용 표준 포맷 파일로 만들어 주고 관련 메타데이터를 등록해주는 인제스트 서버 설치됨
- 편집실 : 인제스트룸에서 만들어진 파일 베이스로 편집할 수 있는 NLE 설치됨
- 생방 송출 부분 : 최종 편집이 끝난 파일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송출해주는 송출용 비디오 서버 설치됨

3. 아카이브

- 제작 영역 내 미디어 중 스토리지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 가치가 있는 모든 영상들의 장기 보관을 목표로 DTL (Digital Tape Library) 로 파일을 이동시켜 보관
- 주조정실에서 송출이 끝난 미디어 파일도 일정기간 보관후 DTL로 이동
- 생방송의 경우 주조정실에 설치된 "Live Ingest 서버"를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진 후 Archiving됨

현재 송출 부분을 제외하고 제작 영역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각 세부 영역에서의 인제스트/Playback 서버 개발 종료 후 단위기능과 연동기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에 적용될 예정이며 사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총괄 관리하는 DAS (Digital Archive System)의 2.0 버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 될 계획이다.

기존 송출 부분의 비디오 서버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제작용 비디오 서버 또한 외산 장비가 아닌 자체 혹은 공동 개발의 산물로서, 지난 10년간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Sony와 Panasonic 등 외산 장비 업체들이 차지했던 방송용 A/V 신호 입출력 장비의 어느 정도의 국산화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는 어렵게 내렸던 '결단'과 개발과 방송 적용 과정에서 수많은 거친 '시행착오'도 녹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비의 국산화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든 무언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닦치게 될 수많은 '결단의 순간'과 '시행착오'는 방송 기술인의 숙명이 아닐까 한다.

새로운 미래를 계획합니다



조영균
KBS 미래미디어 송신기획부 직원

“디지털 전환 업무부터 송신망 구축계획, 난시청 파악에 위성활용 방안까지, 한 마디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마주앉은 KBS 송신기획부 조영균 사원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웃음 속에 알 수 없는 열정이 꿈틀대는것이 보였다면 착각일까. 비록 상투적이지만, 조영균 사원과의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늘 인터뷰는 KBS 미래미디어 송신기획부 조영균 사원과 함께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디지털 방송(D-TV) 전환 사업부터 송신망 구축계획, 난시청 지역 파악 및 해결전략 등을 담당하는 조영균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을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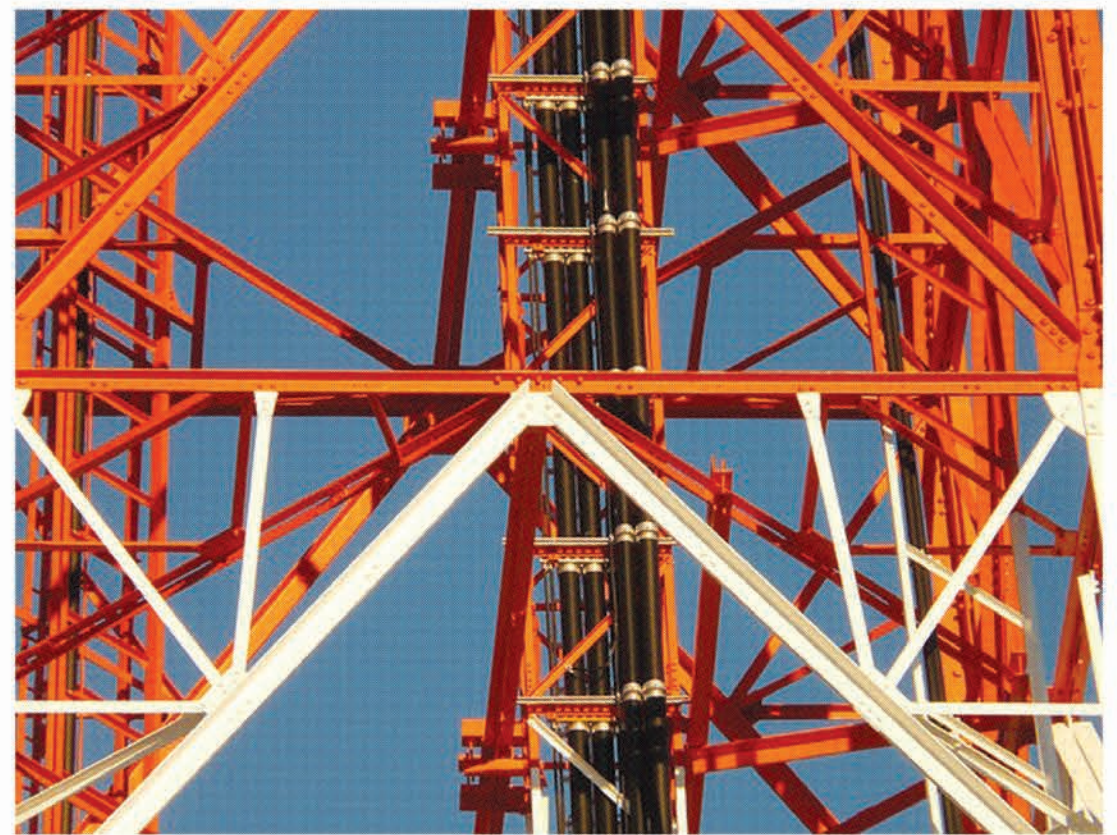
—한 마디로 송신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작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송신사업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배우는 재미’에도 푹 빠져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디지털 방송 전환 기획 업무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요즘 큰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데 정부 차원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KBS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조금 열악하기는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이 시작될 경우 취약계층의 시청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 비율이 96%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4%도 최대한



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 학교 선배가 KBS에 입사했고 그 선배가 엔지니어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방송국에는 PD나 작가, 배우만 있는 줄 알았지 엔지니어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세상을 알아가면 대학생이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죠. (웃음)그래서 과감히 KBS에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던데요

—네. 앞서 언급한대로 입사 후에는 지방에서 근무했는데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 할수록 ‘전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단점이 보였다고 할까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기들은 ‘음향을 하고 싶다’ 등등의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더 열심히 기본적인 제작 업무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힘이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업무를 하시다가 기획업무로 넘어 오셨는데, 걱정은 없으셨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기획업무 자체의 매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 모두 매력이죠. 사실 기획이라는 것이 모든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마칠때의 쾌감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저는 사소한 태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예절 같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을 뜻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획업무를 하면서 유관부서는 물론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는것.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춘천 KBS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사내부부죠. 그런데 아내에게는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집이 서울이라 저는 출퇴근하기 쉽지만 아내는 춘천까지 왕복하느라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래도 서로 조금씩 더 참고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수신기획, 정책기획, 뉴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익혀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특성과 특징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일들을 두루 경험해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배워야 하고 스스로 같고 닮아야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이를 수 있는 열정이 있으니까요.

엔지니어로서, 기획자로서 조영균 사원은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고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다. 조직의 활력소이자 열정적인 그는 ‘최고의 사원’으로 불릴만 하다.



젊어보이시는데요, 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04년에 입사했으니 8년차가 됩니다. 처음 5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올라온 뒤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담당했다가 지금의 부서로 온 것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빨리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홍보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른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영균 사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리라



소소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법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휴양지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린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고 중에서 특히 물놀이 사고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자주 일어난다.

이에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매일 듣는 이야기 또 들어?' 라고 얼굴을 찌푸리는 당신, 매일 듣는 소리에 진리가 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라.

최근 4년간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놀이 사고의 54%는 오후 2시부터 6시, 10대 이하 피해자가 34%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안전수칙불이행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80%다.

1. 바다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법

역시 최고의 대처법은 예방이다. 우선 휴가철이 집중된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는 넓디넓은 바다라 해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이때 들어닥치는 파도는 10세 이하 어린이들을 순식간에 물에 빠뜨리고 불바는 인파로 인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반드시 3미터 반경으로 아이를 두어야 한다. 물론,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

그리고 아무리 귀찮아도 세균감염과 타박상을 대비해 물안경과 수영복은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명조끼도 챙기자. 단, 최근 보도에 따르면 'KS 마크'가 없는 구명조끼는 소용이 없다고 하니 이 점도 명심하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젠 상식이지만 바다는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조류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려 뛰어들면 안 된다. 소방방재청의 '2011 하계 물놀이 대처법'에 따르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같이 구하러 들어가

면 익사할 확률이 70%라고 한다. 상황 발생시에는 긴 로프를 이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물에 뜨는 페트병 등을 던져준다.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하단을 묶은 다음 바람을 넣어 급조튜브를 만들어도 좋다. 그리고 계속 소리치며 패닉상태에 빠진 익사위험자의 시선을 잡아끌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위험한 곳을 가지 않는 센스도 필요하다. 예방이 최고다.

2.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법

계곡의 경우 예방법과 대처법은 바다와 동일하다. 하지만 수심이 바다보다 낮다고 쉽게 보면 정말 대형사고가 터지기 쉬운 곳이 바로 계곡이다. 특히 계곡은 수심이 깊을수록 물 속이 혼탁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곡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물 속에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와 비가 올 때다. 계곡 물 바닥은 대부분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좁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닥에 부딪치면 쉽게 소용돌이를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 휘말리면 건장한 남자도 꿈쩍없이 당하고 만다. 다행히 이런 부분은 조금만 유심히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자. 그리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반드시 철수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지리산 뱀사골 사태 등등 계곡에 내린 비가 불어나면 단 몇 초만에 산 정상에서 높이 3~4미터의 '물 벽'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물에 휘말리면 바위나 나무에 부딪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 싶으면 텐트나 차를 고지대로 대피시켜야 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법은 사실 뻔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뻔한 사고로 인해 너무나 슬픈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모든 일들은 예방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다. 명심하자. 행복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방송기술저널은 사회·문화면을 신설하고, 다양한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한 책이나 영화, 잊을 수 없는 맛을 지닌 먹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맛있는 여행지 등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주세요. journal@kobeta.com으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방송기술저널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 안전한 약이란 없다



세상에 안전한 약이란 없다. 마약류인 필로폰도 처음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었다. 헤로인도 부작용 없는 진통제로 판매하다가 중독의 부작용이 밝혀져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의사나 약사는 이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우려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는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나 약사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70%가 심야나 주말, 약국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부에서 약품 오남용을 우려하지만 현재 약국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감기약을 무제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국에서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감기약을 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약국에서 약을 무제한 판매하고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70%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이유는 심야나 주말 동안 아플 경우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밤이나 주말에 아프면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안전한 대처 방법이나 먹어야 되는 약 등을 물어볼 곳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약의 오남용으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영국, 노르웨이 등은 이런 문제를 시간 외 진료센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시간 외 진료센터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진료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 진료센터들은 오후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운영되는데 꼭 응급 환자가 아니어도 시민들은 이곳을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우선 전화 상담을 받는다.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맞은 약의 명칭과 올바른 약의 복용법, 그 외에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요법 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전화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는 진료센터를 방문하든가 의사가 왕진을 간다.

이 같은 지역내 상담진료센터와 함께 약국의 당번제를 강제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심야약국 운영, 휴일당번약국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실시부터 다시 재검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무조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실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성보다 편리성만을 강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 약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전송망 관리(MSPP) 과정

교육과정 소개

- 통신사가 서비스 제공중인 MSPP통합망 등 전송망 기본기술의 이해와 다양한 서비스 및 신기술 소개

교육일정 및 대상

• 일정

1차 : 2011. 08. 03(수) ~ 08. 05(금) / 2박 3일

2차 : 2011. 11. 09(수) ~ 11. 11(금)

- 수강생 구성 :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 직원 30명

방송사별 배정인원

방송사	배정인원	비고
KBS	10	- 각 방송사별 총 배정인원
MBC	8	
SBS	6	
EBS	4	
지상파 방송사 (지역민방 포함)	방송사 별 1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digitalpr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각사 교육담당자의 교육인원 확정 후 교육생이 직접 온라인 접수

기타

- 교육비 : 무료
- 교육생 출장비(숙·식비)는 각사 자체부담
- 기타 문의사항은 기타 문의사항은 디지털 방송기술 교육센터 (서울 : 02-781-5163 ~ 4, 수원 : 031-219-8261 ~ 4)로 연락바랍니다.

교육 커리큘럼

일차	시작시간 - 종료시간	교육시간	과목명	강사
1일차	10:30 ~ 11:00	1	안내	진행자
	11:00 ~ 12:00		개설목적 및 전송망 운용	KBS
	12:00 ~ 13:00		점심	양세주부장
	13:00 ~ 18:00 (전송망 이론)	5	• 전송망 기초(PCM 이론 등) • 동기식 전송망 개요 및 다중화 이론 • MSPP의 개황 및 Eos이론 • 신기술 소개(Carrier Ethernet, RODAM 등)	KT
2일차	09:30 ~ 18:00 (MSPP 통합망운용)	7.5	• 방송망 서비스 -현장중계 서비스개요(국제, 현장, 수시 등) • 최신 전송장비 특성 및 방송신호 전송 -비압축, 초저지연, IP코덱 장비 등	LGU+ 김봉균부장
			• 방송 통합전송망 개요 -개요 및 서비스 구성 -MSPP장비와 방송장비간 연동 • 방송 통합전송망 서비스 - 제공사례 및 운용, 보호 및 신호절제	
			• IP망 서비스 -IP망 개념 및 특성, 사내망 및 인터넷망 -해외지국망 구성 및 특성(MPLS, Ethernet) -아카이브 네트워크, 기타 IP전달망 소개	
3일차	09:30 ~ 12:00 (CLOUD 컴퓨팅)	2.5	• 클라우드가 만드는 IT변화 • 클라우드 개념 및 특징	KT
	12:00 ~ 13:00		점심	
	13:00 ~ 14:30	3	• 클라우드 성장배경 및 시장전망 • 클라우드 서비스 (KT)	
	16:00 ~ 16:30		교육설문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음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편특혜, 자의적 논리 벗어나야

정 용 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합편성채널이 시험방송을 거쳐 개국을 예정하고 있다. 원래 신규미디어가 출범하면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미디어전문가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신문방송 경영에 대한 우려나 미디어법의 처리를 둘러싼 MB정부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다. 자본에 친화적인 우파정부가 등장하면 신문방송경영이나 미디어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되었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같은 소셜 미디어시대에 사량산업인 신문사가 방송을 경영하여도 여론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지상파가 짧게

는 2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몇 년 만에 따라 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어 조중동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는 종편특혜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의무재송신외에도 방송사 직접광고영업, 기존의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유예, 전문의약품 등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완화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편특혜의 논리가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이 신규매체이므로 지원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바꾸어 말하면 종합편성채널의 생존과 발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태여 4개씩이나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원초적인 의문이 든다.

현재 무리한 종합편성채널의 허가는 비교적 정정지대에 있는 기존의 방송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1990년대 뉴미디어 다채널이 시작되면서부터 최근까지 지상파는 공익논리에 입각하여 보도, 교양, 오락을 골고루 편성하고 여론 영향력이 민감한 보도부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전문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에 공급되는 채널이다.

이처럼 지상파가 뉴미디어에 모두 공급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또 다른 준지상파채널을 보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필요 때문에 조중동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 차라리 프랑스의 TF1처럼 지상파를 사유화시키는 것이 낫았을지도 모른다. 한해 몇 천억 원하는 추가재원만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이라도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의 공익성이나 뉴미디어의 다양성 철학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상파의 공익성논리를 따른다면 의무재송신과 낮은 채널을 배정하고 미디어랩을 통한 위탁, 방송발전기금 납부와 전문의약

품 등 광고금지품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시청하는 특혜를 부여받는 대신에 엄격한 영업윤리를 준수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뉴미디어의 다양성 철학을 따른다면 방송발전기금 유예, 광고규제완화와 직접광고영업이 가능한 대신에 의무재송신과 낮은 채널을 배정받아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중반에 케이블 TV가 시작되면서 지난 20년동안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신규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오천만 인구의 좁은 국토에 케이블TV에 이어 위성방송, DMB, IPTV, 종합편성채널까지 온갖 채널로 넘쳐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상파론턴츠가 이틈만 달리란 뉴미디어사업자에게 전송되어 재송신 감당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정된 가입자를 둘러싼 뉴미디어간의 이전투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내년이면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디지털체제에 걸맞게 방송체제도 정비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종편특혜는 중지되어야 한다.

한국 방송의 현주소 : 비판적 방송저널리즘의 위기

김 형 일

극동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다”며 “갑갑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촛불은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다.

트라우마의 유발요인은 자명했다. 출범 초기부터 국민들과의 소통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추진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광우병의 위협성을 다룬 MBC <PD수첩>의 허위보도가 국민들을 자극해서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집요한

공세를 취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하는가 하면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31개월 만에 내려진 재판결과는 무죄였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유발원인이 아니라 이미 깊어진 상처의 증후였을 뿐이다. 당시 끓어오르기 시작한 민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진단은 심각한 오진이었다.

하지만 명백한 오진에 뒤이는 정부의 자가치료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풀이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의 비판적 보도기능을 마비시키기로 작정한 듯하다. 먼저 시작한 일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였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영상 배임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은 재량권 일탈이고 정 사장의 배임혐의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MBC의 경우도 경영상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편성도 경영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동원해서 <PD수첩> 등의 방송을 문제삼아 엄기영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과 논리를 동원하여 현 정부가 임명한 새로운 경영진은 기대대로 비판적인 방송저널리즘의 싹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조직 개편과 인사조치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런 조치들은 특히 비판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시사교양부서에 집중되었다. 조직

이 나눠거나 해체되는가 하면 주요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내는 등 보복성 인사가 단행되었다.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은 경영진의 당연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새로 구축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아이템은 아예 제작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도 방송이 금지되거나 내용을 수정해서 내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 관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규제를 당했고 얼마 전에는 정치인 부인의 일상을 다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모호한 이유로 불방되기도 했다. 심지어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가 하면 탤런트 김여진 씨의 라디오 고정출연 문제로 인해 담당국장이 문책을 당하고 고정출연 제한과 관련한 방송사 심의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방송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그 과정을 면밀히 보면 과거와 달리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의 통제기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

가 임명권을 가진 경영진이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를 위한 경로를 단단히 구축하고, 내부심의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진 스스로가 아이템 선정에서 편집까지 일상적 자기검열을 수행하도록 순치한 것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무슨 뚜렷한 방송철학이 있거나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미디어랩 제도나 수신료 문제 등 중대한 방송정책에 대해서 여태껏 갈팡질팡하는 것이나 종편채널을 무턱대고 4개나 허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면 짐작할 만하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도 경영진의 개입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정부의 촛불 트라우마를 치유해 보아겠다는 일부 경영진의 과잉충성이 그동안 쌓아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 구축된 내부통제 기제는 지속적으로 비판적 방송 저널리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송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나 공세까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민주적 가치인 것이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KOBA 2012 제22회 국제방송 음향·조명기기전

22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2.5월중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예정)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kobashow.com

